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통합 요약)

2024. 1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5
[1주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6
I. 연구 개관	6
1. 연구 목적	6
2. 연구 필요성	6
3. 연구 방법	6
II. 공판중심주의 개관	7
1. 공판중심주의의 의미	7
2. 복잡사건 현황	8
III. 개선방향의 목표 설정	10
IV. 해외 사법례	11
가. 독일	11
나. 프랑스	11
다. 영국	12
라. 미국	12
마. 일본	14
바. 시사점	16
V. 복잡사건의 심리 효율화 방안	17
1. 증거신청 및 채부의 적정화	17
가. 문제점	17
나. 개선방향(소송관계인의 협조의무)	18
다. 증거채부의 적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18



2. 증인조사의 효율화	22
가. 문제점	22
나. 효율적인 증인채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22
다. 효율적인 증인신문 계획의 수립방안	28
라. 증인신문 범위의 효과적인 제한 방안	31
마.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인조사 방안	33
3. 서증조사의 효율화 방안	34
4. 수사기록 열람·복사의 신속화	36
가. 문제점	37
나. 개선방안	38
5.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효율화	39
가.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마련의 필요성	39
나.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의 효율화	41
다. 형사전자소송 환경 하에서 녹취 실무의 개선안	48
VI. 효율적인 심리모델의 제안	50
1. 심리모델	50
가. 기본모델	50
나. 변형모델	50
2. 복잡사건에 있어서 심리모델의 구체화	51
[2주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57
I. 검토 배경	57
I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58
1. 형사사건 통계 및 현황	58
2. 재판실무 및 문제점	58
가. 통상적인 형사단독 증거조사 절차(자백 사건: 전체 사건의 85~90%)	58
나. 문제점	59
III. 해외 주요 국가의 간이재판절차	60



IV.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개관	60
1. 절차개시의 요건	60
2.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61
V. 간이공판절차의 운용 실태	61
1. 간이공판절차 이용 현황	61
2. 간이공판절차 회부사건 수 감소 원인	61
가.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으로서 ‘자백’ 요건의 엄격성	62
나. 통상 공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의 동조화	62
VI.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62
1.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필요성	62
2.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63
가. 방향 → 자백 외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	63
나. 개정안 예시	63
3. 21대 국회 논의 경과	64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	65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65
4. 결론	66
[3주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방안]	67
I. 검토 배경	67
1. 피고인의 출석권과 출석 의무	67
2. 현황 및 문제점	67
3.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개선방안 검토	67
II. 사례 및 시사점	68
1. 사례 소개	68
2. 시사점	68
III. 현행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개관	68



1. 소속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68
가. 관련 규정	69
나. 요건 개관	69
다. 제정 및 개정 경위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69
2. 공시송달 재판 진행 현황	70
가. 공시송달의 필요성	70
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	70
다.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문제점	71
IV. 해외 입법례	71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72
가. 문제점 1: 불출석 사유와 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제도 설계	72
나. 문제점 2: 피고인에게 불출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72
다. 개선 방향	73
2. 구체적인 개선방안	73
가. 불출석 사유·단계별 유형화	73
나. 3유형의 개선방안	74
다. 4유형의 개선방안	76
3. 결론	79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 경과]	80
1. 일시 및 장소	80
가. 제2차 회의	80
나. 제3차 회의	80
2. 회의 요지	80
가.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80
나.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관련	82
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관련	83



[건의문]

■ 지향점

- 형사재판에서 나타나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증 형성의 어려움, 심리 단절,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방식을 적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쟁심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검사 보관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주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I. 연구 개관

1. 연구 목적

- 쟁점이 많고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형사사건(이하 ‘복잡사건’)에서 심리 효율화를 위한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 복잡사건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한계가 극명함

-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위해 2007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 ☞ 과거와 같은 조서재판의 관행은 사라짐
- 그러나 복잡사건의 경우 증거의 양이 방대한 데다가 제도의 약점을 파고드는 실무의 대응(대부분 진술증거 부동의)과 검찰의 무죄방지를 위한 옥석구분 없는 증인신청(증인조사의 과잉화)이 고착화되고 있음
 - ☞ [재판부가 심리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움] → [효율적인 증거조사의 어려움] → [재판의 장기화] → [재판부 변동에 따른 심증 단절의 악순환 반복]

■ 실증적인 연구 부족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무와 학계의 여러 연구가 존재하였음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약 17년에 이르는 현재 공판중심주의의 현실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3. 연구 방법

■ 실증적인 연구 지향



- 복잡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관, 변호사, 검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6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간담회 개최(2024. 4. 19.)
 - 고등법원 형사항소심 재판장, 변호사 2명(국선변호사 포함)과의 인터뷰
 - 대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은 2명의 검사와 서면 인터뷰
- ☞ 실무가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현행 형사소송규칙 및 관련 예규에 관한 개선안 및 효율적인 심리방법 제안
- 형사재판의 효율화를 위한 해외 제도와 실무 조사
 - 미국과 일본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서면 질의
 - 각국의 최신 실무례 조사
- ☞ 시사점을 토대로 형사소송규칙 개선안 제안

II. 공판중심주의 개관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 의의

-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

■ 내용

- [헌법] ☞ 적법절차의 원칙,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를 요청
- [형사소송법] ☞ 이념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였으나, 과거에는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이른바 ‘조서재판’ 관행이 만연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헌법적 요청] 및 [조서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내·외부의 공감] ☞ 2007. 6. 1. 형사소송법 대대적으로 개정
-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심리 원칙’, ‘구두변론주의’ 등이 명문화됨

■ 한계



-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가 제출되는 복잡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의 한계가 극명히 나타남

2. 복잡사건 현황

■ 통계

- 대표적인 복잡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사건 중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
- 2019년~2023년까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74건(강력범죄 4건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의 권력형 부패사건, 선거범죄,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대형 경제사건,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임)에 대한 처리기간, 공판기일 횟수, 증인수에 관한 통계 분석¹⁾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증가 추세 ☞ 복잡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2019년 8건 ▶ 2020년 10건 ▶ 2021년 15건 ▶ 2022년 21건 ▶ 2023년 20건

☞ 제1심 전국 형사합의부 사건과의 통계와 비교

2019년과 202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을 같은 기간 전국 제1심 전국 형사합의부 사건과 비교(☞ 2019~2020년 사이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은 모두 종국된 반면, 2021년~2023년 사이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은 대부분은 종결되지 않아 향후 처리일수와 증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2020년 사이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과 같은 기간 종국된 전국 제1심 형사합의부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통계의 왜곡 없이 객관적인 현황을 비교·검토 가능)

복잡사건의 [처리일수]는 평균 574.45일이 더 소요되었고, [공판횟수]는 평균 48.45회, [증인수]는 평균 47.25명이 더 많았음

1) 구체적인 통계현황은 연구보고서 9면 이하 참조



구분 연도	전국 제1심 형사합의부						복잡사건				
	처리일수		평균 공판 횟수	증인수			처리일수 2)	평균 공판 횟수	증인수		
	구속	불구속		증인 있는 사건수	전체 증인수	평균 증인 수			증인 있는 사건수	전체 증인 수	평균 증인 수
2019	122.5	174	3.4	4,004	15,730	3.9	703.8	65.1	6	297	49.5
2020	131.3	194.2	3.6	3,660	14,542	3.9	756.1	38.8	6	317	52.8
전체 평균	126.9	184.1	3.5	3,832	15,136	3.9	729.95	51.95	6	307	51.15
	155.5										

■ 원인

● 방대한 양의 증거 제출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한 대량 증거의 압수수색 일반화 → 디지털 증거를 통한 증거의 대량 생산 및 제출
- 디지털 증거에 기초하여 생산된 자료들이 옥석구분 없이 제출
- 무죄 방지를 위해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일단 제출해 놓고 법원의 판단만을 구함

● 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실무의 대응

- 조서에 대한 불신 : 수사기관에 유리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진술의 왜곡이 심하다고 인식(☞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내용부인만으로 쉽게 증거능력이 없어짐)
- 구속 피고인 :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사건을 천천히 진행해 석방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익을 누리려 함
- 선출직 공무원 : 재판지연 전략을 통해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선고받기를 희망

● 이른바 ‘깜깜이’ 재판 진행

- 공소장일본주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에 의해 재판부만 증거의 내용과 중요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리 진행

2) 구속, 불구속 피고인 모두 같은 날 종결되어 별도로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구분하지 않음



■ 부작용

- [재판부] : 심리의 어려움에 따른 형사합의 재판부 기피 경향 ▶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증가 ▶ 심리 및 심증 단절
- [피고인] :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소송비용 증가 ▶ 경제력이 부족한 피고인 ▶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불가
- [언론] : 민감한 정치사건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연 문제 집중 보도 ▶ 국민의 사법불신

Ⅲ. 개선방향의 목표 설정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발견

■ 충실한 재판 VS 신속한 재판

- **충실한 재판** : 충실한 심리를 거쳐 유·무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 **신속한 재판** : 절차로부터 피고인의 조속한 해방, 증거의 멸실·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형사 절차에 투입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함
- ☞ 충실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은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양자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
- ☞ 특정 재판에 있어 어떠한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앞세울 것인지는 사건의 특성에 맞춰 재판부가 두 개의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함

■ 복잡사건에서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의 실현 방법

- 복잡사건 : 공판중심주의의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재판
-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통한 집중심리 필요 ⇒ 효과적인 심증형성 ⇒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으로 귀결
- 효율적인 증거조사 : 모든 원본증거를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없음 ⇒ 방대한 양의 증거 중 최우량 증거를 선별하여 효과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함

- **집중심리** : 사건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심리의 주도권을 가져야 함

IV. 해외 사법례

가. 독일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검사가 기소시 공소장과 함께 증거기록을 제출하고, 법원은 재판 이전에 증거를 열람하여 사건내용과 증거관계를 미리 파악함
- 증거조사 역시 재판부 주도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증인신문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먼저 신문함)
-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은 ‘직접주의’라는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법칙과 그 예외 규정과 유사함

나. 프랑스

- 프랑스의 형사절차는 크게 소추, 예심, 판결 절차의 3단계로 구분함. 예심절차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절차로서 예심판사가 공판에 앞서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함. 예심판사는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임의수사와 강제처분도 가능함(예심판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제한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됨)
- **공소장일본주의 미적용** : 독일과 같이 재판 전에 법원이 증거기록을 미리 검토할 수 있음
- **전문법칙의 미적용** : 독일의 직접주의나,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에 해당하는 증거법상 원칙이 존재하지 않음. ‘증거자유 원칙’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 가능. 단, 자유심증주의하에 수사 주체별로 차등하여 증거가치를 부여함(Ex.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



과한 약한 증거가치를 가짐)

다. 영국

● 전문법칙의 태동과 운영

- 약 200여 년 전 사적 소추가 허용되는 등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법칙 탄생
- Common Law상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1984년 처음으로 경찰과 형사증거법에 성문화되었고, 그 후 1988년에 제정된 형사사법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2003년 전면 개정됨)
-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예외가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문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Ex. 정의의 관점에 의한 전문증거의 인정 및 재량에 의한 증거배제 등)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두터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옴

라. 미국

■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

-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 대부분이 배심재판에 의해 이루어짐
- 형사재판에서 사법자원의 효율화 : 배심재판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형사재판을 종결하여 배심재판 수의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기소인부제도 및 양형협상제도 등)
- 배심재판의 효율화 : ‘집중심리’와 ‘즉시평결’이 요구되기에 사실심리에 앞서 배심원에게 현출할 증거를 선별하는 ‘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 of evidence)’이 발전해 옴

■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의 증거법칙

제401조 (관련 증거의 정의)

관련 증거는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그 증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거나 낮게 만드는 경향을 가진 증거를 의미한다.

제402조 (관련성 있는 증거의 일반적 허용성)



연방헌법, 연방의회법, 이 규칙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증거는 허용된다.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03조 (편견, 혼란이나 소송지연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

관련성이 있어도 불공정한 편견, 쟁점의 혼란, 배심 오도의 위험, 또는 부당한 지연, 시간낭비, 불필요한 중첩 증거의 제출에 대한 고려가 그 증거가치를 실질적으로 능가하면 그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

- FRE가 규율하는 증거법칙은 ‘중요하고(material) 관련성 있는(relevant) 증거는 증거배제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한(competent) 증거로 허용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음
-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라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조사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 해당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증거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그 증거는 배제됨

■ 증거배제 실무례

- 배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재판절차를 협의하고, 배심원에게 현출할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및 ‘공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 절차를 진행함
- 공판 전 심리는 원칙적으로 증거취득 과정이 적법한지, 위법한 수사활동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었는지 등 적법절차의 심리에 국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확립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수사의 적법성, 진술의 임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관 내지 유력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 취득과정뿐만 아니라 증거의 내용도 노출이 됨
-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는 공판 전 심리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위 과정을 통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를 파악 ⇒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증인은 배제함



☞ 공소장일본주의 및 예단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위와 같이 재판 전에 판사가 주요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유·무죄 등 사실인정 판단은 배심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재판장은 배심재판의 절차 주재자로서 배심원에게 노출될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

■ 전문법칙의 적용

-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전문법칙이 1975년에 제정된 FRE에 명문화됨
-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문증거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규정도 존재함(FRE 제807조 : 문제의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합리적 노력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 다른 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갖고, 이를 증거로 허용함이 증거법의 일반적 목적과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 전문증거라도 허용이 됨)

마. 일본

■ 형사사법절차의 특징

- 일본도 우리와 같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과거 ‘조서재판’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검찰은 ‘만일을 대비한 입증(念のための立証)’을 위해 요증사실과 관련이 없는 수사자료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일본도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참심제인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5년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우리의 공판준비절차와 유사한 ‘공판전정리절차’를 도입함
- 재판원 재판의 경우 증거의 압축이 필요하였는데, 기존대로 검찰의 ‘만일을 대비한 입증’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재판원 제도의 정착이 어렵게 되고, 또 그러한 관행이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신청인의 ‘증거 엄선의무’ 조항을 신설함(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89조의2)



■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89조의2(증거의 엄선)

증거조사는 증명할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만을 엄선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증거의 엄선 제출에 관한 실무와 판례

일본 판사에 대한 서면 질의

Q. 일본의 경우 복잡사건에 있어서 검찰관이 참고인 진술조서 등 대량의 진술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진술증거 모두를 부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A. 일본의 경우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6명을 넘는 경우는 0.6%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대량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나, 증거의 청구 시점에서는 입증에 불가결한 것에 한정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9조의2).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당사자 쌍방과 법원이 쟁점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검찰관이 엄선한 다음 변호인이 진정으로 신용성을 다투는 증인과 관련된 조서만 부동의하여 심문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동의한 서증에 대해서는 양측이 납득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증거제출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Q. 한국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하여 판사가 증거신청 단계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증인이 중요하고 어떤 증인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공판전정리절차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A. 공판전정리절차에서는 증거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증거에 기초한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그 전제에서 재판관이 한 증복되거나 쟁점과의 관계가 부족한 증거에 대한 필요성 촉구(최종적으로는 증거의 필요성 판단은 재판관의 전권이므로 그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한 압박)에 당사자가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증거 청구는 상당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재판소의 하급심 판례(東京地判 令和 1年(2019) 7月 4日, 平成29年(合) 第275号)]

위 사안은 개호인인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를 욕조에 던져 익사시켜 살해했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개호인로서의 가동상황, 범행에 이르는 경위, 범행상황 및 진술상황 등’을 입증취지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은 과정을 녹음·녹화한 기록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청구하



였음.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자백은 임의성이 결여되었고, 해당 조사 과정이 녹음·녹화된 내용의 기록매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쟁점의 확산, 심리의 비대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89조의2에 의한 증거의 엄선 조항을 들어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요증사실의 입증에 얼마나 유익하는지(협회의 필요성)]와 [판단자의 혼란이나 오해를 막는 등 해당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상당성)]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이며, 협회의 필요성의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구체적으로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 드러내는 방법의 유무(증거방법으로서의 대체 가능성)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따로 피고인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위 기록매체를 대체할 다른 증거나 증인은 존재하지 않음), 상당성에 대해서는 기록매체를 법정에서 장시간 재생하여 조사하는 것의 폐해의 유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본건 기록매체에는 조사의 전 과정이 녹음·녹화되었고, 범행상황에 대한 자백을 넘는 진술 내용(즉 쟁점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입증취지 중 ‘범행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인이 약 80분간 경찰에서 한 진술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 상당성의 문제를 고려해 영상은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약 80분간의 녹음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함

바. 시사점

- 독일과 프랑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직업법관이 공소제기와 함께 미리 증거를 살피고, 증거조사도 재판장이 주도하므로, 법관이 심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
-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전문법칙이 태동하여 발전하였지만, 현재는 그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었고, 전문법칙의 예외도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됨
- 미국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와 예단배제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판사가 미리 증거의 내용을 탐지하고 배심원에게 현출할 증거를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공판전정리절차와 유사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였지만, 일본의 ‘증거 엄선의무’ 조항과 같은 내용의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음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2007년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음에도 오늘날 다시금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 대륙법계의 직접주의와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을 모두 수용한 후 각 제도의 원칙적인 운영만을 강조한 반면, 각 시스템의 한계에 대처하는 각국의 실무례는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
- 증거법 역시 우리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와 전문법칙 등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을 뿐, 외국에서와 같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중요사건에 있어서의 적시처리 필요성, 불필요한 중첩증거의 배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존재하지 않았음

V. 복잡사건의 심리 효율화 방안

1. 증거신청 및 채부의 적정화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심리방식의 적정화를 위하여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가 이루어져야 함

가. 문제점

- 오늘날 복잡사건에서 **[검찰]**은 과거 일본과 같이 ‘만일을 대비한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대부분을 취사선택 없이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증거채택을 하고 증거조사에 심리 대부분을 할애
-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단계만 넘으면 그 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 판단대상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심리구조**
-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거조사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증거채부 기준의 도입 필요성 ↑**



나. 개선방향(소송관계인의 협조의무)

- 복잡사건의 심리가 복잡·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폐단은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및 피고인에게도 모두 미침
- 복잡사건의 심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증거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필요한 증거를 압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실제 재판에서도 그러한 실무가 정착되어야 함
- ☞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거신청 단계에서 증거를 선별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꼭 필요한 증거만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꼭 필요한 증거의 선별 기준으로 사실인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 입증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증거조사시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증거, 증명이 완료되었거나 명백한 사실에 관한 증거 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그 내용을 명문화 필요가 있음

다. 증거채부의 적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증거 선별의무 및 증거채부의 기준 마련(규칙개정안)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필요한</u>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③ <신 설>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삭제)</u>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u>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해야 한다.</u> ③ <u>법원은 제1, 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u>



현행	개정안
	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은 그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의의 및 개선효과

- [소송관계인의 증거 선별의무 도입]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신청에 관해 제 132조에서 일괄 신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개정안에는 증거신청인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할 의무 (이하 ‘증거 선별의무’)를 부과

☞ 다만, 증거의 일괄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132조 제1항에서도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중복된 느낌을 배제하기 위해 제 1항의 ‘필요한’ 문구는 삭제함

- [관련성과 필요성에 기한 구체적 증거채부 기준 신설] 증거 선별과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 있어야 하고, 그 입증에 꼭 필요한 증거여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만일 이에 어긋나는 증거신청이거나, 해당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 여기서 ‘재판의 부당한 지연 초래’란 재판지연 의도로 고의로 뒤늦게 한 증거신청이나, 실권효 규정을 위반해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적시에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입증가치가 크지 않고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증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3)에서 정하는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였을 경우 증거신청이 각하’ 되는 경우와는 그 내용과 적용범위를 달리함

- [증거신청인]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고, 해당 사실의 증명에 꼭

3)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필요한 증거로 증거신청의 범위를 압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증거내용 또한 조사해야 할 요점에 맞춰 증거를 신청해야 함

- **[재판부]**는 증거채부 과정에서 신청한 증거가 증명할 사실의 입증에 꼭 필요한 증거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심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과 같이 증거신청인에게 입증취지를 현재의 실무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게 할 필요가 있음

2) 증거신청 단계에서 입증취지 기재의 의무화(실무 개선안)

■ 필요성

- 앞선 증거선별의무와 관련성과 필요성에 기한 증거채부 기준이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될 경우 재판부로서는 증거신청인이 신청하는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고, 입증에 꼭 필요한 증거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함
- 재판부가 증거채부 과정에서 신청하는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고 증명에 꼭 필요한 증거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증거채부 과정에서 증거의 내용을 미리 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자칫 공소장일본주의 및 예단배제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공소장일본주의와 예단배제의 법칙 등 공판중심주의적 심리 환경하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에 기한 증거채부를 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증취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는 것임

■ 문제점

-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신청시 입증취지를 밝히게 되어 있음에도(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실무에서는 검사가 입증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증거목록의 제출로 증거신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
- 재판부에서 각 증거별로 입증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사에게 ‘증거설명서’ 등 입증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판준비명령을 보내야 함
- 현행 증거목록에는 따로 입증취지를 기재하는 란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사항 등’ 항목에 검사가 ‘공소사실’, ‘양형자료’, ‘자백’ 등의 문구만을 간단히 적어 제출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 우리의 증거목록에 대응하는 ‘증거 등 관계 카드’에 입증 취지(공소사실별) 항목이 따로 있어 검사가 이 부분에 입증사실과 해당 증거가 입증하려는 공소사실을 적어 제출하고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증거조사 단계에서 입증취지를 구체화한 ‘증거설명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복잡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검사가 증거신청 단계에서 입증취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상의 증거목록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 현행 증거목록 양식

-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상의 양식

순 번	증거방법					참조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 의견		증거 결정		증거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거명칭	성명			기 일	내용	기 일	내용		
1	사 경	24 ~ 3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자백							

■ 증거목록 개선안(별지)

- 현행 ‘참조사항 등’을 ‘입증취지(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의 관계)’로 변경
☞ 명시적으로 증거목록에 입증취지의 기재를 의무화
- 현행 ‘세로’ 양식에서 [별지2] 양식과 같이 ‘가로’ 양식으로 변경
☞ 검사는 입증취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판부는 해당 증거목록을 재판자료로 유용하게 활용⁴⁾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1차적으로 증거신청 단계에서 증거목록상 입증취지가 현출되고, 증거목록을 제출받은 재판부에서는 입증취지가 부족한 증거를 특정하여 입증취지의 구

4) 실무적으로 대부분 판사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법관통합재판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증거자료 정리 및 판결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음



체화를 명할 수 있음

- 재판부로서는 구체적인 입증취지를 통해 신청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해당 공소사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해당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해당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증거목록은 반드시 피고인 측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제출받은 증거목록을 토대로 열람·복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증인조사의 효율화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인채부 및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

가. 문제점

- 복잡사건에서 검찰은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리한 일부 자료 외에는 진술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음
- 주요 증인의 경우 수십 번씩 불러서 증언을 듣고 공소사실과 큰 관련성이 없는 증인도 대부분 채택이 되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판의 효율성 추구는 사실상 불가능함 ⇒ **증인조사의 과잉화** ⇒ **재판지연**
- 증인채부 단계에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과 입증취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불필요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등 심리의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나. 효율적인 증인채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⁵⁾

1) 효율적인 증인채부 방법 세 가지를 제안

- 실무가들의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토대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함
- 각 방안은 우열관계 × → 사건 특성에 맞춰 재판부가 적절히 병용·변형 활용 가능

5) 구체적인 모의사례는 연구보고서 60면 이하 참조



2) [제1안] 쟁점별 주요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안

■ 핵심

- [쟁점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 [재판부의 사건내용 및 증거관계 파악] ⇒ [중복되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 및 피고인 측의 변의동의 유도] ⇒ [심증이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류 증인 채택]

■ 의의 및 검토

- (+)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 가능
- (+) 핵심 증인신문 이후에는 검찰과 변호인의 자발적인 증인신청 철회 및 변의동의 유도가 가능해짐
- (+)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심증을 가지게 된 재판부로서는 직권으로 무관하거나 중복된 증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 보류된 증인이 상당수에 이를 수 있고,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도 증인신청 철회나 변의동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상태에서 다시 장기간의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다른 재판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3) [제2안] 공소사실별 증거분류 및 중요도에 따른 증거채부 안

■ 핵심

- 증인신청 단계에서 검사로 하여금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인]과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간접증인]으로 구분하도록 함

[증인 구분 예시]

공소사실	증인	입증취지(공소사실 관련성)	관련증거
제1항	직접증인		
	박준혁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공범으로서 나도건설이 (주)다라의 협력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주)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	#21, 27, 4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5, 78, 84 카카오톡



		특 메시지
강현우	(주)다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나도건설이 (주)다라의 협력업체에 등록되었고, 향후 (주)다라가 나도건설에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공사 일부를 하도급줄 계획이 있었음을 입증	#23 검찰 진술조서
최은정	(주)다라의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공사 실시팀장으로서 나도건설이 (주)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경위 전반을 입증	#37 검찰 진술조서 #45 협력업체 관련 내부보고서
간접증인		
이지현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전부터 피고인과 박준혁 사이에 깊은 친분이 있었음을 입증	#36 검찰 진술조서 #41 보고서
이태현	(주)다라의 협력업체 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주)다라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을 입증	#38 검찰 진술조서
서민우	나도건설 기획팀장으로서 나도건설이 (주)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경위 입증	#39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측에게 각 증인에 대한 증거의견을 [진술 탄핵], [구체적 진술내용 확인 요], [원진술과 내용 상이], [위법수집증거], [공소사실과 관련성 없음] 등으로 유형화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반대신문의 필요성도 구분하여(상/중/하) 밝히도록 함

[피고인 측 공소사실별 증거인부 예시]6)

공소 사실	직접증인			간접증인		
	증인	부동의 취지	반대 신문 필요성	증인	부동의 취지	반대 신문 필요성
1항	박준혁	진술탄핵 필요	상	이지현	구체적 진술 확인 요	중
	강현우	진술탄핵 필요	상	이태현	공소사실과 무관	하
	최은정	원진술과 상이	상	서민우	공소사실과 무관	하

-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표시한 증인에 대해서는 검사로 하여금 입증취지를 다시 확인한 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로 판단될 경우

6) 연구보고서 지면상 부동의 취지를 간단히 적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진술탄핵의 경우 어떤 부분을 탄핵할 예정인지, 어떠한 진술 부분이 원진술과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 [직접증인]은 원칙적으로 채택을 하고, [간접증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밝힌 반대신문의 범위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높은 증인들을 우선 채택
- 1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재판부의 심증 여하와 검사와 피고인 측의 보류증인에 대한 채부 의견을 청취한 후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

■ 의의 및 검토

- (+) 공소사실별 증거를 직접증거 / 간접증거 /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 반대신문의 필요성과 정도를 예측하여 증거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류증인의 채부 과정에서 채택 여부의 구체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은 복잡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모든 증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증거분류 작업에 검사와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4) [제3안] 공소사실별 구체적 증거 기재 안

■ 핵심

- 객관적 서증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서증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증조사에 비중을 두는 방법으로 증인조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소사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다툼이 없는 부분을 구분한 후 인증과 서증이 중복될 경우 증거조사가 용이한 서증을 우선 증거조사하고, 중복 증인 가운데에는 보다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먼저 실시한 후 나머지 신청 증인들에 대한 채부를 진행함

■ <1단계> 공소사실 중 다툼 있는 부분과 다툼 없는 부분의 구분



-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

☞ 1차적으로는 다툼이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차단하고, 2차적으로는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 있음

■ <2단계> : 검사의 관련 증거 구체적 거시

-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해당 공소사실에 직접 표시하도록 함⁷⁾

[공소사실별 증거표시 예(공소장 기재형)]

다툼 없는 사실 부분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김갑수는 주식회사 동북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배호경은 주식회사 서국의 대표이사이다. [다툼 없음]

피고인 김갑수, 피고인 배호경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상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실제 상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피해은행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25 배호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4 김민지 검찰 진술조서, #36 이준호 검찰 진술조서, #100 문자메시지, #109 카카오톡 대화내역 #134 거래계약서]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김갑수는 2023. 5. 10. 주식회사 동북의 직원 김민지로 하여금 주식회사 동북이 주식회사 서국에 공급가액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내역이 적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34 김민지 검찰 진술조서, #74 이동석 작성 내부 보고서, #81 이동석 작성 이메일, #102 회사 내

7)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으나,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를 밝혀 해당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일본의 경우 검사가 '모두진술 요지'라는 서면에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표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함 (자세한 양식은 연구보고서 76-77면 참조)



부 메신저, #107 세금계산서, #134 거래계약서], 피고인 배호경은 같은 날 주식회사 서국 소속 직원 이준호로 하여금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36 이준호 검찰 진술조서, #160 외상매출채권 발급내역].

피고인 김갑수는 2023. 5. 24. 직원 김민지로 하여금 피해은행인 구진은행에 주식회사 서국이 발급한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구진은행의 대출담당자 최동현으로 하여금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등록하게 하고[#34 배호경 검찰 진술조서, #131 최동현 검찰 진술조서, #150 은행 전산화면, #190 대출실행내역], 같은 날 구진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2억 원을 대출받았다.[다툼 없음]

이로써 피고인 김갑수, 피고인 배호경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3단계> 증인채부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

- 검사가 공소사실에 거시한 증거는 직접증거로, 거시하지 않은 증거는 간접증거 내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에 직접 거시하지 않은 증거서류에 관한 증인신청은 원칙적으로 채택을 보류하거나 기각함

● [객관적인 서증과 진술증거의 구분]

- 공소사실에 직접 거시한 서증 중 해당 공소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증인신문에 앞서 해당 서증을 우선 조사하고, 진술증거는 채택을 보류한 후 서증조사 이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심증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채택

● [중복된 증인에 대한 선별적 채택]

- 동일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진술증거가 중복되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해당 진술증거의 중요도를 밝히도록 한 후 가장 중요한 증인 1인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보류 내지는 기각

■ <4단계> 보류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부

- 앞선 증거분류 절차를 통해 우선 채택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1차 서증조사를 마친 이후 각 공소사실별 재판부의 심증 여하에 따라 보류한 증인들에



대한 채부 절차를 진행

■ 검토

- (+) 객관적 서증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증인의 채택 범위를 최소화 가능
- (+)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1차적으로 선별하기 용이함
- (+) 증인이 증언할 내용과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 (+) 판결문 작성시 증거관계 파악 매우 용이
- (-) 객관적인 서증에 우선순위를 두어 증거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작성자가 있는 증거서류를 부동의하는 경우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피고인 측에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 대부분의 경우 핵심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내용 파악과 다른 증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다. 효율적인 증인신문 계획의 수립방안

1) 입증계획서 제출을 통한 증인신문 일정 수립

- 효과적인 증인신문 기일지정을 위하여 증인신청 단계에서 쌍방으로부터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 예상 신문시간이 포함된 [입증계획서]를 제출받음
-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대부분 복잡사건에서는 검찰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 ☞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증인의 중요도를 가늠하고, 해당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예측하여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

[입증계획서 예시(검사용)]

증인신문 계획						
순번	성명	해당 증거 서류	입증취지 (증명하려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소재지/ 연락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번호, 호,	출석 가능 여부 (확실히 가능, 알 수 없음, 가능	예상 신문 시간



				전자우편주 소 등)	예상)	
1						
2						
3						

2) 증인신문 스케줄의 작성

- 재판부는 쌍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증인신문 스케줄⁸⁾을 작성하면 향후 복잡사건의 전반적인 심리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다만, 앞선 증인채부 과정에서 채부를 보류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대비해 여유 기일을 비워둘 필요가 있음

신문 증인	검찰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	total 기일
	예상시간 [기일]	예상시간 [기일]	예상시간 [기일]	예상시간 [기일]	
채택 증인					
D	8시간 [1회]	16시간 [2회]	8시간 [1회]	4시간 [0.5회]	4.5일
E	8시간 [1회]	12시간 [1.5회]	8시간 [1회]	2시간 [0.25회]	3.75일
F	8시간 [1회]	12시간 [1.5회]	8시간 [1회]	4시간 [0.5회]	4일
G	2시간 [0.25회]	4시간 [0.5회]	4시간 [0.5회]	2시간 [0.25회]	1.5일
B (공동피 고인)	8시간 [1회]	16시간 [2회]	피고인 신문 별도 진행	8시간 [1회]	4일
C (공동피 고인)	2시간 [0.25회]	4시간 [0.5회]	4시간 [0.5회]	피고인 신문 별도 진행	1.25일
A (공동피 고인)	4시간 [0.5회]	피고인 신문 별도 진행	8시간 [1회]	4시간 [0.5회]	2일
보류 증인					
H	1시간 [0.125회]	2시간 [0.25회]	1시간 [0.125회]	1시간 [0.125회]	0.625일

8) 간담회에 참석한 A부장판사가 복잡사건의 심리를 위해 실제 사용한 양식임



I	1시간 [0.125회]	2시간 [0.25회]	1시간 [0.125회]	1시간 [0.125회]	0.625일
J	1시간 [0.125회]	2시간 [0.25회]	1시간 [0.125회]	1시간 [0.125회]	0.625일
피고인 측 신청 증인					
K (피고인 A 신청)	2시간 (반대신문) [0.25회]	4시간 [0.5회]	-	-	0.75일
L (피고인 B 신청)	2시간 (반대신문) [0.25회]	-	2시간 [0.25회]	-	0.5일
피고인 신문					
A	8시간 [1회]	4시간 [0.5회]	-	-	1.5일
B	4시간 [0.5회]	-	2시간 [0.25회]	-	0.75일
C	2시간 [0.25회]	-	-	2시간 [0.25회]	0.5일
total	26.875일 (±30회 기일 예상)				

3) 증인신문기일의 일괄 지정 및 집중적인 증인조사의 실시

- 복잡사건 대부분은 증인 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효과적인 심증형성을 위해서는 증인신문기일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집중심리의 원칙)
- 과거 집중심리 원칙이 강조되던 시절에는 주 3회 이상을 연일 개정하며 증인 신문 기일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으나, 복잡사건에 있어서는 방대한 증거량과 증인신문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 1회 내지는 주 2회 간격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⁹⁾
- 한편, 공판준비절차의 종료 효과로서 실권효가 적용되므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는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게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청한 증인 외 다른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하지 않겠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 증인신문기일을 일괄 지정한 경우 증인소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이 경우 증인 신청자의 증인출석 노력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2

9)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복잡 구속사건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2회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불 구속 사건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항에 따라 신청인 측에 증인출석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증인출석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라. 증인신문 범위의 효과적인 제한 방안

1) 문제점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해당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게 되었음
- 구 형사소송규칙(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3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되어 2022. 1. 1. 시행을 앞두고 위 조항이 **삭제**되었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3항 삭제 경위]

-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상녹화물 중 어느 부분을 재생할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3항을 도입함 ☞ 그렇지 않으면, 영상녹화물 전체를 재생하여야 하므로, 공판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한 공판절차의 모습이 왜곡된다는 취지
- 반면,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조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의 의견진술이 허용되고, 대부분의 실무에서도 단순 내용부인 형식의 의견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사라졌고,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도 삭제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

- 현재 실무에서는 피고인 측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



나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의견을 밝힐 경우, 재판부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범 간에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이 핵심적인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의 내용부인 증거의견만으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어 실제적 진실발견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

2) 개선방안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시 부동의 부분의 특정 요구

- 하나의 증거에 대한 의견은 가분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하나의 조서 내에 여러 개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함께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증거의견을 밝힐 수 있음
-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 하여금 내용을 부인(부동의)한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를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재판부가 전제사실, 사건의 경위,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음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하는 경우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면 향후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부분에 집중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증으로 제출받아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피고인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는 경우 검찰이 향후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때 다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가급적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쪽’과 ‘열’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명하고, 검사로 하여금 해당 부분을 삭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인조사 방안

1)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의 예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공권적 증명문서나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써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말함¹⁰⁾
-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증거서류로 ‘공공기록, 보고서, 역서(曆書),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스포츠 기록, 공무원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등 작성자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고, 업무상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객관적인 서류 등 아주 예외적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되지 않은 문서 중 업무상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기안문, 결재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에서 정하는 증거능력 요건에 따라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정성립과 함께 피고인 측에 신문의 기회를 부여 위 과정에서 증인의 소환과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2) 개선방안

- 오늘날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 중에는 정확성과 신용성이 보장되어 굳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내용에 대해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측이 해당 증거서류를 부동의하였다 하

10)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여 무조건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고,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반대신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반대신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규정에 의해 증인을 소환해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실무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 핵심적인 증인이 아닌 이상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고,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사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서류 중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
 - 만일 피고인 측에서 진정성립 외에 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 검찰의 주신문은 문서의 진정성립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최소화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 후 검사는 재주신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증인신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3. 서증조사의 효율화 방안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쟁점에 집중된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1) 동의한 서증과 부동의한 서증의 분리 조사

- 동의한 서증에 대해 증인조사에 앞서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증인신문 범위의 제한 및 효과적인 개입신문 등으로 심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 부동의한 서증(대부분 진술증거인 증거서류)에 대해 증인조사를 마친 후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변동내역과 피고인 측이 탄핵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쟁점별 내지는 증인과 연관된 서증의 연계조사

- 사건의 특성에 따라 동의한 서증에 대해서는 관련 증인조사에 앞서 관련 서증 조사를 실시하고 증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쟁점을 크게 나눌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별로 서증과 증인을 조사하기로 하고, 매번 쟁점 관련 심리 시작 단계에서 해당 쟁점에 한정하여 먼저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증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음(후술하는 공판심리 모델 참조)

3) 유연한 조사 방식의 채택

- 복잡사건의 경우 서증의 양이 상당히 많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이 예정한 증거서류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방법인 낭독에 의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PPT 내지는 실물화상기를 활용해 입증취지와 해당 증거서류의 내용을 고지(요지 고지)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조사할 서증에 대한 [증거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함

4) 서증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청취(서증조사의 핵심)

- 형사소송법 제293조에서는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증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각 서증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면 사건 전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해당 증거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증조사 이후에는 피고인 측에게 해당 서증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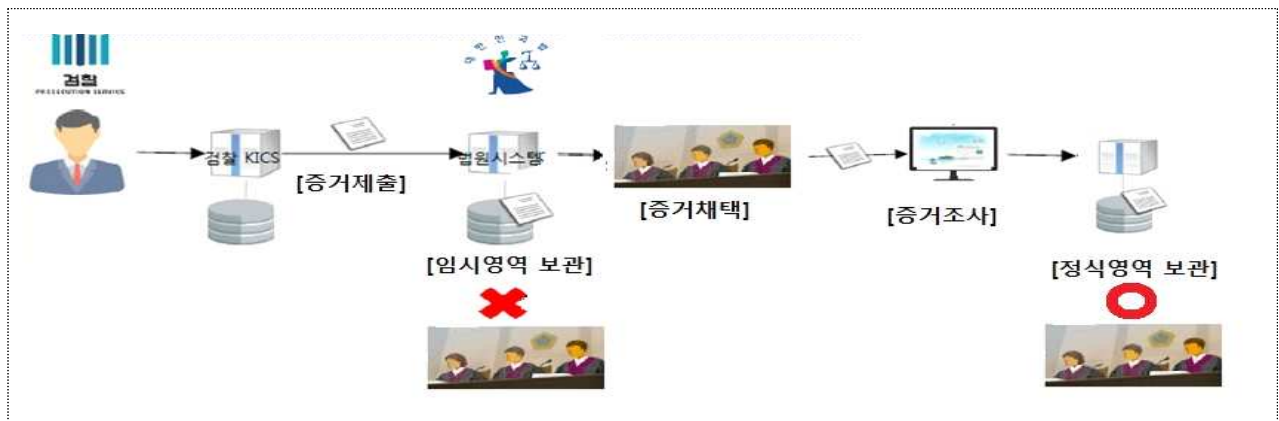
5) 증거분리제출 제도의 유연한 운영

- 기록분리제출 제도에 따라 서증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증거목록 순번이 아닌 증거조사 순서에 따라 증거를 제출받고, 색지로 제출받은 기록을 구

분하도록 되어 있음{증거분리제출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그러나 실무상 증거조사 순서에 따라 서증을 제출받는 경우 실무관은 기록보관(분실 우려)과 편철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증거기록 검토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서증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 서증에 대해서는 검사로부터 스캔 또는 복사한 사본을 우선 제출받고, 원본 증거는 변론종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음¹¹⁾
 - ☞ 재판부가 서증조사 때마다 증거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서증조사 후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순서대로 편철된 온전한 기록을 제출받는 경우 수사의 흐름 등 사건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실무관, 참여관 역시 기록보관과 편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현행 기록분리제출제도에 따른 문제점은 형사전자소송이 실시될 경우 곧바로 해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증거조사순’, ‘작성일자순’에 따라 증거기록을 정렬 가능)될 것으로 보이므로, 복잡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에 따라 기록분리제출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이 타당함

[향후 시행될 형사전자소송의 증거조사 흐름도]



4. 수사기록 열람·복사의 신속화

11) 2024. 4. 19.자 간담회에서 실무례 청취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공소제기 직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가.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는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복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공간의 협소와 복사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제’ 방식으로 열람·복사 예약을 받고, 열람·복사 신청 순서대로 기일을 통지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오고 있음

[변호사가 느끼는 열람·복사 과정의 어려움]

○ 현행 검찰의 증거기록 복사 절차

-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검찰은 순번대로 복사기 1대를 배정하여 예약
- 예약된 일정에 복사,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마스킹 작업, 검찰 직원에 의한 비실명화 검수 및 해당 부분 재복사 순서로 진행
- 직원 1명, 복사기 1대를 기준으로 하루당 증거기록 2권 복사가 최대

○ 복잡사건의 경우 복수의 직원을 투입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검찰은 복잡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시점에도 기록 제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 후 1~2개월 경과 후에야 비로소 복사일정을 잡아 통보해주고 있음
- 기록이 4~50권에 이르는 대형 사건의 경우 2명이 직원이 전담해서 복사를 해도 대략 2주 이상, 3주가량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
- 기록 복사 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파일을 나누거나 책갈피 작업을 한 다음 OCR 작업까지 마쳐 변호인들에게 기록이 전달되는 데에 최소한 1~2주 소요
- 결국 복잡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최소한 2개월가량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변호인에게 기록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음

[재판부가 느끼는 애로사항]

열람등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변론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복잡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2달 내에는 실질적인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움(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만기 부담 가중).

실무상 공판준비절차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피고인의 구체적 주장 없는 개괄적 부인 의견 개진,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 밝히지 아니한 대거 부동의)에서 일단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이후 준비절차 종결에 따른 실권효를 강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그에



따라 재판부는 실질적인 쟁점 파악 및 구체적 심리계획 수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없고 상당한 기간 변론이 진행되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때까지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게 됨

- 현재 복잡사건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재판지연 초래** ⇒ **공판준비절차 형해화** ⇒ 증거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응 **모든 증거 부동의** ⇒ 검사의 **과잉된 증인신청** ⇒ **심리의 비효율화**

나. 개선방안

- 향후 시행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전자화된 형사기록에 대하여는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될 경우 기록 열람·복사 지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비록 검찰에서 신청 순번대로 기록 열람·복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제도운영이 절대적인 원칙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공판 검사에게 열람·복사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 원래의 순번보다 빨리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함
- 따라서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열람·복사 지연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함

■ 법원의 검사에 대한 열람·등사 명령 활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법원이 검찰에 기록 열람·복사 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명령에는 시기나 방법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피고인 측이 신청한 열람·복사가 검찰청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열람·복사 거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 측의 열람·복사 신



청에 적극 협조하고, 만일 특정 시점까지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¹²⁾에 따라 검사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 ☞ 열람·복사 지연에 의한 재판공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찰에 대한 협조 요청

- 다음과 같은 사건 유형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기록 열람·복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적시 처리 필요성 있음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¹³⁾ : 법에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음
 - <구속사건> : 구속기간 초과시 구속의 취지가 함몰될 수 있음
 - <법원에 의한 기록 열람·복사 명령 사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실효성 확보
-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록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써 검찰에 기록 열람·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안건을 건의해 그 결의를 거쳐 검찰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함

5.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효율화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갱신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가.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마련의 필요성

12)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13)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형사소송규칙상 녹음, 영상자료 대한 증거조사 방식은 ‘**재생 및 청취**’가 **유일**함(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 반면, 서증의 경우 서류 전부에 대한 낭독을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증거서류의 내용만을 요약하여 고지하거나 열람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오늘날 녹음, 녹화 기술의 발전과 CCTV 설치 확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에서 제출되는 녹음, 영상자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 **녹음, 영상자료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또한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후술할 공판절차의 갱신 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증거조사 문제 역시 위와 같은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의 경직성에서 기인함
- 특히, 과거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던 강압적인 조사 관행이 사라지고, 임의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조사 과정 전부가 대부분 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상녹화물의 본증화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녹음, 영상자료에 대한 새로운 증거방법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조사의 정도	서증	녹음·영상자료
전부 조사	낭독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하여 청취(시청)
일부 조사	내용고지(요약 고지)	중요부분만 재생하여 청취(시청)
요약 조사	열람	법관 및 상대방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빠르게 재생 및 청취(시청)

- 서증조사에 있어 낭독은 녹음·영상자료의 전부 재생 및 청취(시청)에, 내용고지(요약고지)는 중요 부분의 재생 및 청취(시청)에, 열람은 상대방이 확인하고



자 하는 내용만을 빠르게 재생 및 청취(시청)에 각 대응시킬 수 있음

- 실무적으로도 CCTV 녹화물 등이 증거로 제시되어 증거조사를 할 경우 소송 관계인으로 하여금 요증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도록 한 후 해당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시청)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제안함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② 생략 ③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신 설>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생할 녹음·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u>

나.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의 효율화

1) 문제점

- 재판 도중 판사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기존 재판부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함. 단,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같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간이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이하 ‘형사녹음예규’)에 의하면, ① 증인신문을 녹음한 녹음물은 증인신문조서의 일부가 되고, 형사소송규칙상 ②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은 ‘재생 및 청취’ 방식이 유일함
- 따라서 공판절차 갱신 과정에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시 소송관계인이 상당한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녹음물 전부를 재생하여 청취하여야 함
-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측의 동의를 얻어 간이한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오고 있으나, 최근 특정 재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간이한 방법의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변경 전 재판부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녹음물을 전부 재생하여 공판절차 갱신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

2) 개선 필요성

- 2015년 법정 녹음제도가 전면 도입되면서 증인신문을 녹음한 녹음물을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하는 내용으로 형사녹음예규가 개정됨
- 그러나 공판절차 갱신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1982. 12. 31. 제정된 이후 사실상 개정된 적이 없음(제144조 제4호, 제5호에서 규정되어 있던 ‘직권으로’ 문구만 삭제됨)
- 증인신문절차를 본격적으로 녹음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에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에서 녹음물을 재생·청취할 사건은 거의 없었고,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은 현재와 같은 녹음물의 전부 재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임
- 조서 또는 녹음물이 증거방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별개 차원의 영역임
- 기존 증인신문 내용의 개관 및 요지 파악 측면에서는 청각정보 보다 시각정보가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법관의 오감을 활용한 사실정보 획득이라는 증거조사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음성 그대로를 활자로 변환한 자료는 음성정보



와 일체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한편, 최근 실무에서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에서 간이한 증거조사 방법에 부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재판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내지는 형사녹음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구체적인 개선안

■ **[제1안]**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특칙 규정 신설안(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p>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p> <p>① 1. 2. 3. 생략</p> <p>4.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5. 생략</p> <p>② 생략</p> <p>③ <u><신 설></u></p>	<p>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p> <p>① 1. 2. 3. 현행과 같음</p> <p>4.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u>다만,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u></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녹취서를 조사함에 있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u></p>



현행	개정안
	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녹화매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 또는 시청하면서 녹취서 등 기재내용의 일치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안]** 형사녹음예규 제5조의2 개정안(녹음물과 녹취서의 조서화 방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취서는 녹음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조서와 별개의 재판기록으로 편철하게 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으로 녹음물의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u>재판장은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음물은 녹취서의 기재내용의 일치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게 한다.</u>

■ **[제3안]** 형사소송규칙과 형사녹음예규를 동시에 개정하는 안

[형사녹음예규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p> <p>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취서는 녹음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조서와 별개의 재판기록으로 편철하게 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으로 녹음물의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의2(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p> <p>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u>재판장은 녹음물과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u></p>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p> <p>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p> <p>1. 2. 3. 생략</p> <p>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p>	<p>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1. 2. 3. (현행과 같음)</p> <p>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p>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5. 생략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과 녹취서 가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증거조사 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 [제4안] 소송지연 목적에 대한 제재안

현행	개정안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② 생략 ③ 재판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 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u>검사,</u> <u>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u> <u>때에는</u>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 여 법 제292조·제292조의2·제292 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 를 할 수 있다.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 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u>검사,</u> <u>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u> <u>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동의하지</u> <u>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u>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 제292조의2·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4) 검토

- [제1안], [제4안]은 형사소송규칙만으로, [제2안]은 형사녹음예규만의 각 개정
만으로 앞서 본 공판절차 갱신절차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정녹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
고, 녹음물이 녹취서에 비해 보다 우월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공감 하에 형사녹



- 음예규를 개정한 취지를 무색화시키고, 다시 ‘조서재판’ 으로 회귀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제4안]의 경우 소송지연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와 충돌(기피 신청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제3안]의 경우 향후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화하는 솔루션이 법정녹음시스템에 구현되는 등 녹음물과 녹취서의 내용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고, 형사소송규칙과 형사녹음예규를 모두 개정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 적합한 개선안은 아님
 - 한편,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14)에 의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공판정에서 다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 경우 앞서 본 공판절차의 갱신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제1안처럼 형사소송규칙만을 개정하는 경우 기일 외 증인신문에서의 문제를 함께 해소하지는 못함
 - 그러나 기일 외 증인신문의 경우 직전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의 내용이 담긴 조서만을 재조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전 재판부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전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공판절차 갱신에 비해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아직까지 기일 외 증인신문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녹음물의 전부 재생문제가 표면화된 적이 없고, 모든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녹취서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앞서 제안한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이 규칙에 반영되면, 증인신문 녹음물의 중요부분 재생만으로도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특칙을 규정한 [제1안]에 따르는 것

14) ▣ 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제291조(증거조사)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타당함

[제1안]에 의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

(1) 소송관계인이 간이한 조사방법에 동의한 경우

[서증] : 재판장은 변경 전 재판부에서 서증조사를 실시한 서증 중 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하는 서증에 대해서는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알리는 방식(상당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직접증거 등 주된 서증들에 대해서는 각 신청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

[증인신문조서] : 재판부에서 미리 종전 재판부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내용을 기록을 통해 파악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주도하에 그 중요사항의 요지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리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실시하고, 증인신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 중요부분을 직접 재생하거나, 해당 녹음물의 녹취서를 실물화상기에 현출시켜 해당 부분을 같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

(2) 소송관계인이 간이한 조사방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서증] : 재판장은 서증 제출인으로 하여금 각 서증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실시

[증인신문조서] : 녹취서의 주요 부분을 검사로 하여금 내용고지 하도록 하되, 피고인 측에서 녹취서의 동일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요 부분에 대한 재생을 요청하는 경우 녹음물의 해당 부분을 직접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실시

다. 형사전자소송 환경 하에서 녹취 실무의 개선안

1) 문제점

- 복잡사건에서는 증인수와 증인신문 양이 방대하여 증인신문 녹취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속기사의 업무 또한 과중되고 있음
- 복잡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측에서 대부분 증인신문 녹취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있지만, 녹취서 작성에서부터 결재 및 열람·복사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2주가 소요되어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 및 재판준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판부에서도 녹취서가 완성될 때까지 기존에 실시한 증인신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기도 함

2) 개선안¹⁵⁾

■ 음성-텍스트 변환(STT) 솔루션 도입

- 대법원에서는 2018년도 ‘음성인식 기반 법정녹음 지능형 자동기록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텍스트 정확도가 떨어지고(업체 파악 75.3%, 속기사들이 느끼는 실제 인식율 약 60%), 시스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법정녹음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음성-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었고, 음성인식률 오차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임(상용화된 특정 번역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접목해 프로그램 내에서 진술자의 목소리를 구분해 진술자를 구분하고, 외국어에 대해서는 번역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음)
- 향후 형사전자소송 실시에 맞추어 기존 법정녹음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정에서 녹음한 녹음물을 즉각 텍스트화하고, 텍스트화된 파일은 전자소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을 제안함

3) 기대효과

- 녹음물과 이를 그대로 텍스트화한 녹취서는 영화의 음성과 자막 스크립트와 같이 일체를 이뤄 조서의 일부가 되고, 청각과 시각적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향후 [속기사]는 녹음물의 텍스트화 과정에서 제대로 변환되지 못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재판장의 명에 따라 요지 기재 방식의 녹취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현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텍스트화된 녹취파일은 스크립트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텍

15)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문의한 결과 음성-텍스트 변환(STT) 사업은 올해 사법정보화실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관련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함



스트화된 특정 부분에 소송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녹음 부분을 찾아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Ⅵ. 효율적인 심리모델의 제안

1. 심리모델

가. 기본모델

■ 요약

- 2016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 남성민 부장판사가 발표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서 언급한 집중심리 방식이 현재 복잡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모델로 자리 잡혀 있음
-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파악 및 증거채부를 진행 후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 측에서 동의한 증거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한 후 증인신문에 들어감
-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증거서류에 대한 서증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거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서류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심증 형성

■ 심리절차도


공판심리모델 절차도



나. 변형모델

■ 요약



- 피고인 측에서 증거물인 서증을 제외한 대부분 진술증거를 부동의한 경우 동의한 서증에 대한 서증조사를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서증조사를 통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검사로 하여금 관련 증인신문 기일에 서증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서증조사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 후 해당 증인신문에 앞서(또는 증인신문 직후)에 서증조사를 실시  각 공판기일마다 쟁점이 크게 부각되는 것에 더하여 해당 기일에서 관련 서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사건파악이 가능해짐

■ 심리절차도

공판심리모델 절차도(변형모델)



2. 복잡사건에 있어서 심리모델의 구체화

1) 원칙적인 공판준비절차의 운영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의하면 공판준비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가급적 쟁점의 정리와 소송관계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함이 바람직함
-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검사에게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개괄적인 설명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PPT를 준비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측에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주장사항을 정리해오도록 하여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판준비기일은 쟁점정리와 증거신청과 채부, 향후 심리계획 마련을 위한 중



요한 단계로서 적어도 한 달 내 2~3회 운영함이 바람직함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사건파악 및 쟁점정리)

■ 검사의 사건개요 설명

- 검사로 하여금 준비해온 PPT를 활용해 사건의 내용과 주된 쟁점을 설명하도록 함

■ 피고인 측의 입장과 주장 정리

-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제출된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를 청취

■ 제2회 공판준비기일 안내

-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의 증거신청과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검사와 피고인 측에 송부
-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때까지 기록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서 본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명령을 활용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함

3) 제2회 공판준비기일(증거신청 및 채부, 입증계획 청취)

■ 증거신청, 증거의견 및 입증계획 청취

-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증거목록을 제출받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재판부가 처음 접하는 증거목록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대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 부동의한 증거, 채부결정을 보류한 증거, 진술자가 동일한 증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제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제2회 공판준비기일 전에 미리 증거목록과 증거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향후 시행될 **형사전자소송**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인부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증거목록을 전자소송포털에 등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증거의견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증거목록 제출과 증거의견을 밝히는 공판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보임

■ 증거채부

-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을 미리 검토하여 당연히 증거신청을 기각할 서증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기각함
- 복잡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증인의 수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채택할 증인을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곧바로 증인신청에 대한 채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후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그 채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안내

-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관한 채부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협의하는 절차임을 미리 고지함

■ 공판준비절차 이후 향후 재판일정 검토

- 양측에서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공판준비절차 이후 재판부 내부에서 향후 재판계획을 세움
- 앞서 본 증인신문 스케줄표를 활용하면 재판진행에 필요한 일수를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함

4) 제3회 공판준비기일(증인채택 및 향후 재판일정 협의)

- 쌍방이 신청한 증인신청에 대한 채부
- 향후 재판일정 협의(증인 스케줄표 활용)
- 증인신문 기일의 일괄 지정(보류한 증인에 대한 추가 채택을 위해 다소 여유 있는 증인신문 기일의 지정 필요)

5) 제1회 공판기일



- 모두절차(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¹⁶⁾)
- 동의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기본모델의 경우)
- 서증조사 후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 청취

6) 제2회 공판기일 이후

- 공소사실별(또는 쟁점별) 증인신문
- 본격적인(핵심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부동의한 증거서류 중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증거의 가치가 낮은 사실상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각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위한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증인신문을 선행하여 실시하고, 본격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관련된 서증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변형모델)¹⁷⁾
- 공판준비절차에서 협의한 증인신문기일에 맞춰 증인신문 진행
-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보류한 증인채택을 진행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중복된 증언이 예상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 측에게도 부동의한 증거서류 중 번의하여 동의할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 필요

7) 부동의한 서증 및 송부되어 온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부동의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 검사로 하여금 증인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 법정에서 한 것 사이에 변동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면 증인의 진술변동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피고인 측에게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탄핵한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 송부되어 온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16) 피고인 측의 최초 답변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루어졌으나, 공판준비절차 이후 입장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다만, 주요증인이 작성한 증거서류가 여러 개이고, 그 중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인출석의 편의를 위해 해당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신문시 그 진정성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제출명령은 회신서가 도착하여 기록에 가철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판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측이 증거신청을 한 후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거나, 재판장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형사소송법 제291조)

8) 피고인신문

- 현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피고인 측에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특정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개입신문을 통해 피고인신문이 만연히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9) 변론종결 및 판결서 작성

- 상급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단계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제출자에게 해당 증거를 반환하는 실무례의 정착 필요



[별지] 증거목록 개선안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4고합1234													
2024형제123345 김민수										신청인 : 검사			
순 번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의 관계)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 기일	비고
	작 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 일	내 용	기 일	내 용		
1	검사	5 ~ 24		피의자신문조서	박준혁	나도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나도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다라의 협력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김민수에게 청탁하여 나도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							
2	검사	25 ~ 33		진술조서	이지현	피고인 김민수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박준혁이 피고인 김민수에게 나도건설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음을 입증							
3	검사	34 ~ 38		진술조서	최은정	주식회사 다라의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공사팀장으로서 나도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다라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경위 전반을 입증							



[2주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I. 검토 배경

■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필요성

- ①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 증거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낭독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의 심증 형성에 필요한 중요 증거 위주로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 ②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보다는 양형심리 또는 법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요청임
- ③ 효율적 심리를 통하여 확보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으로서의 간이공판절차 활성화 및 요건 재설계 방안 검토

- 현행법상 탄력적·효율적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인 간이공판절차는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특히 ‘자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원인
- 요건 재설계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① 법리·범의·양형만을 다투는 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낭독·제시하는 등 예외 없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이 법정에서의 심증 형성과 무관하고 오히려 효과적 심증 형성을 방해하며, 당사자 의사에도 반함
 - ② 실무상으로도 형사소송법상 모든 증거조사 규정이 모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향후 위법성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이 적지 않음
- 현행법상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인 ‘자백’ 외에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형사사건 통계 및 현황

▣ 형사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 접수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 처리기간은 최근 5년간 상당히 증가
- 사건의 복잡화 및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 증가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절대 필요 시간은 계속 증가 → 심리 효율화 필요성 증가

▣ 형사재판부의 실무 현황

- 재판기일 多,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부족
-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 재판 시간, 처리기간 증가, 형사 기피 현상 심화

2. 재판실무 및 문제점

가. 통상적인 형사단독 증거조사 절차(자백 사건: 전체 사건의 85~90%)

▣ 관련 법령 규정

- 증거서류 → 신청인의 낭독 / 신청인 또는 재판장의 요지 고지 / 제시·열람 등
- 증거물 → 제시, 음성, 영상자료 → 재생 청취·시청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추가 증거조사 신청 가능성 고지

▣ 실무

	절차 준수 사례	절차 간소화 사례
증거서류	신청인의 모든 증거서류 낭독 > 신청인의 모든 증거 요지 진술 > 재판장의 모든 증거 요지 고지	신청인의 일부 증거 요지 진술 > 재판장의 일부 증거 요지 고지 > 제출만으로 같음
증거물	직접 또는 실물화상기로 제시	미제시(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증거서류와 함께 조사)



	절차 준수 사례	절차 간소화 사례
음성·영상자료	전부 재생	중요 부분 일부 재생 > 미재생

나. 문제점

1) 절차 준수 사례의 문제점 → 심리 충실화, 절차적 권리 보장과 무관한 절차 과중

■ ① 절차의 준수가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구현 및 심리 충실화와 무관함

- 법관의 법정에서의 추가적 심증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 빼앗겨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구현 오히려 방해
- 상세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불가능

■ ②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도 무관함

-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건까지 낭독고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절차를 일일이 거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도 반함
- 당사자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여도 부인 사건에서는 간이한 재판 진행 불가

■ ③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 형사단독의 경우 주 2회 이상 재판, 10분에 2~3건 재판을 진행하여야 접수 대비 처리율을 맞출 수 있는 구조 → 1건당 할애 가능 시간이 많지 않음
- 사법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증거조사 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①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엄격·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관계 심리 ↔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법리를 충실 심리하되, 불필요 증거는 간이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필요
 - ②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중요 증거를 위주로 강약을 조절한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
-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고, 간이공판절차의 활용도도 저조함



2) 절차 간소화 사례의 문제점 →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

■ 현재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실무례 다수 존재(특히 형사단독)

- 중요 증거에 대하여만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 증거서류를 낭독하지 않거나, 모든 증거별로 내용 미고지(법 제292조 제1~4항)
- 음성·영상매체에 대한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 미실시(법 제292조의3)
-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법 제293조)

■ 간소화 진행의 경우 향후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큼

- 공판정 절차 진행에 대한 당사자의 관심이 증대, 공판절차의 녹음 증가
- 불필요한 위법성 다툼 사례 발생 가능
 -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소하면서, 증거서류 낭독 등 절차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 → 절차 위반이 인정되어도 상급심에서 동일한 판결(무익한 절차)

III. 해외 주요 국가의 간이재판절차

■ 사건 유형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제도 마련

- 세계 각국에서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정식재판절차로,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고 있음

■ 당사자의 선택권 마련: 영국, 미국

- 영국, 미국: 일정 경죄는 피고인 동의를 요건으로 간이한 재판절차로 진행

IV.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개관

1. 절차개시의 요건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 ‘자백’은 유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죄책까지 인정하여야 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법원의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재량 +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 설명 要(규칙 제131조)

2.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 전문법칙의 원칙적 미적용(동의 간주) / 단, 이의 가능
-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그대로 적용

■ 증거조사 방식의 간략화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서류·물건의 증거조사 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 불요(법 제291조의 미적용), 그 방법도 반드시 제시, 낭독, 내용 고지, 열람 등으로 제한 ×(법 제292조의 미적용)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 가능
- 증거조사의 종료 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증거신청권 고지 불요(법 제293조의 미적용)

V. 간이공판절차의 운용 실태

1. 간이공판절차 이용 현황

연도	처리인원수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			구성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1998	22,106	179,475	201,581	4,726	95,968	100,694	21.4	53.5	50.0
2003	18,351	195,000	213,351	2,424	75,563	77,987	13.2	38.8	36.6
2008	19,665	248,907	268,572	1,302	48,239	49,541	6.6	19.4	18.4
2013	20,817	239,338	260,155	792	21,806	22,598	3.8	9.1	8.7
2018	19,343	218,356	237,699	51	6,595	6,646	0.3	3.0	2.8
2023	22,443	208,484	230,927	6	3,108	3,114	0.0	1.5	1.4

2. 간이공판절차 회부사건 수 감소 원인



가.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으로서 ‘자백’ 요건의 엄격성

■ 판례의 엄격한 판단

- 판례는 법 제286조의2 규정의 ‘자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 간이공판절차 진행 위법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시 인정 ↔ 반성문, 피고인신문에서 일부 부인

-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진술 시에는 분명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진술 등을 통한 명확한 진술이 아닌 반성문의 세부적 문구, 피고인신문 과정의 부분적 진술, 양형 관련 변론 내용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자백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

■ 실무상 상소심에서의 파기 위험으로 간이공판절차 회부를 주저하는 경향

- 2017년 공판절차 매뉴얼 서술이나 형사재판실무연수 → 신중할 것을 권고

나. 통상 공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의 동조화

■ 심리의 편의 측면

- 통상 공판절차에서도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가 사실상 간이화 내지 형해화되어 있어, 이를 더 간략화하기 위한 간이공판절차 회부 필요성 감소

■ 처리기간 단축 측면

- 간이공판절차를 택하더라도 선고기일 별도 지정 시 처리기간의 차이가 없음

VI.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1.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필요성

- 필요성1: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 필요
- 필요성2: 하급심 실무례의 위법 소지 제거 필요
- 현재로서의 대안 →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 신속처리절차(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중 유일한 활용 가능 제도
- 기존 논의에 대한 타 기관 입장, 공판중심주의 강화 경향 등 고려할 때,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제한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자백’이라는 단일 요건은 간이공판절차 사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요건 재설계를 통하여 공판중심주의 실질화 도모 필요

2.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가. 방향 → 자백 외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

■ 자백 요건의 경직성 극복 필요

- 간이공판절차 활용도 저해의 가장 큰 원인: ‘자백’에 대한 엄격한 판단
- 자백 요건 미준수 파기 후에도 결과에 차이 없음 → 무익한 절차 반복

■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

- 추가적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쌍방 의사합치(일방의 신청 및 타방의 동의)
 - 영국·미국의 예와 같이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백 요건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활용도 제고
- 기대 효과
 - 자백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핵심 증거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적인 증거조사** 가능
 - 상급심에서 자백 불비를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원심 파기 가능성 無

나. 개정안 예시

■ 예시

현행	개정안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u> <u>에는</u>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



<p>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u>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u></p> <p><u>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u></p>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u>피고인 또는 변호인</u>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 쌍방 의사합치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를 가능하게 하되, 법원 재량사항으로 둬
 - 규칙 제131조에 의하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재판장이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 **자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 표준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 필요
-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함
 -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게 하고, 법원이 회부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다면 검사의 신청을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음
 - 기록을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적절한 사건(자백 사건)에 대하여 사건 초기 간이공판절차 신청하는 실무례 형성 가능 → **법원과 피고인에게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의 효율적 진행 도모
- 후술하는 21대 국회 개정안과 같이 변호인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 심판 신청 또는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3. 21대 국회 논의 경과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

■ 내용

현행	개정안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청 및 상대방의 동의’ 를 개시 요건으로 추가
- 다만, 간이공판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동의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신청 또는 동의 가능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 2021. 12. 7. 법사위 1소위 논의

- 검찰 피신 내용부인: 절차 소요 시간 증가 예상 → 보완책 마련 필요 취지
- 관계부처 의견: 법무부 이견 없음, 법원행정처 찬성

■ 1소위 당시 유보적 의견

- 불편함·시간 소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일반인은 증거능력 이해가 부족하므로 간이 절차를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였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된 후 정식절차로 진행한 사례



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준비해서 보고해줄 것

■ 계속 심사 및 임기 만료 폐기

4. 결론

■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입법 필요**

-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는 법정에서 심증 형성에 필요한 **중요 증거 위주로 효과적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증거조사보다 양형, 법리 등 **당사자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효율적 심리를 통하여 확보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전체 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 도모 필요
- 22대에서도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필요



[3주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방안]

I. 검토 배경

1. 피고인의 출석권과 출석 의무

-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며, 이는 단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가능한 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의 형사재판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매년 공시송달 사건 고합 2~300건(1.3%), 고단 5,000건(3%) 유지
- 각종 기사: 피고인의 고의적 불출석, 선고기일 불출석 재판 지연 문제의식 ↑

■ 문제점1: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

- 법원의 조치, 즉 구속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의뢰, 각종 송달 및 연락, 소재 탐지촉탁 등만으로는 의도적으로 도망한 피고인 신병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
- 구속영장은 수사기관 역량·의지 부족으로 별건 체포 경우 외에는 집행 X

■ 문제점2: 불출석 재판을 위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

-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하고 있는지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조치(과거 주소 및 연락처 등에 대한 송달·연락 시도, 소재탐지촉탁 등)를 거쳐야 하고, 소추법 사안은 6개월도 경과하여야 함
- 그러나 의도적 도망 피고인에 대하여는 송달, 연락, 소재탐지는 무용한 절차

3.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추법’) 개선방안 검토

■ 불출석 재판의 불가피성 및 요건 설계 방향

- 불출석 재판을 일률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



불가능, ② 피고인의 도피를 조장(헌재 97바22)

-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①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②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실체진실발견의 측면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을 갖춘 제도가 필요함
- 특히 불출석 재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사재판임을 고려할 때, 불출석 재판 제도가 **피고인의 불출석 유인을 조장**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됨

■ 소추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필요성

- ‘장기 10년 이하 + 소재 확인 필요 조치 + 6개월 + 공시송달’ = 불출석 재판
 - 피고인의 **귀책사유, 절차 진행 단계 불문** 동일한 요건 규정
-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검토 필요

II. 사례 및 시사점

1. 사례 소개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특수상해(징역형만 규정)
 - ① 기간 중 재차 집유 불가 + ② 기간 도과 전 실행 확정 시 기존 집유 실효
- 본인 불출석 + 기일 변경 신청 + **증인 불출석(피고인 권유)** 기일 변경 = 6회
- **선고기일 불출석**, 공시송달 요건 충족 위해 6개월 간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절차 진행 후 판결선고(집행유예기간 이미 도과 → 징역 1년 선고)
- 변호인 항소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확정

2. 시사점

- ① 피고인 불출석 이익 大(동기 有) + ② 재판부는 불출석 재판 요건 충족 과정에서 기간 도과 막지 못함 = **불출석 동기 있는 피고인의 도망 유인 제공**

III. 현행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개관

1. 소추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가. 관련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중략)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②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나. 요건 개관

- ① 소재 확인 조치: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 주소 보정
- ② 최초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동안 소재 미확인
- ③ 공시송달 → 1회 불출석 → 공시송달 →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재판 진행

다. 제정 및 개정 경위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최초 도입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제외

■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 위헌

- 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 ×



- ② 불출석 사유를 따지지 아니한 채 확일적으로 궤석재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고, 책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유죄판결 선고 가능

■ 후속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5헌바21 결정)

- 1999. 12. 28. 소추법 제23조가 현행과 같이 개정됨
 - ① 적용대상 축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사건 제외
 - ② 재심 청구 보장: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시 재심 청구 가능
- 후속 합헌 결정: 법정형 상향(위헌사유1 제거), 재심(위헌사유2 제거)

■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추법 개정 권고(2005. 11. 29.)

- ① 사전 통보라는 최소 절차 無, ② 불출석 관련 피고인 귀책 여부 불문 확일 적용

2. 공시송달 재판 진행 현황

가. 공시송달의 필요성

- 불출석 재판 중 일정 유형 사건에서는 출석의 전제가 되는 ‘송달’ 필요 →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① 소추법, ② 항소심(고정 사건) 2회 연속 불출석
- 각종 출석 확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본 소추법 규정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함

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

■ 상소권회복청구, 재심청구

- ① 상소권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미제기 → 회복 시 항소심 진행
- ② 재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 재심 개시 시 1심 진행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

- ① 공소장이 송달된 바 없는 경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 ② 공소장 송달 또는 공판기일 출석 시 → 공시송달 적법 여부에 따라 결정
 - 공시송달 위법 시 귀책사유 불문 책임 없는 사유 인정 → 선고기일 도주 등 귀책사유 명백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사소한 흠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회복



다.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문제점

■ 공시송달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각종 소재 확인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소재 확인 조치로는 소재 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 외 송달가능 주소를 알기 위한 각종 노력 포함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실무상 상당히 엄격
 - 판례는 증거기록상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연락처로 송달·연락 시도 요구
 - 연락을 안 받을 것이 명백한 전화번호나, 과거 주소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연락·송달·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메일, 페이스북 계정 등)

■ 현행 공시송달 제도의 문제점

- 문제점 1: 증거분리제출 실무와 공시송달 요건 충족의 어려움
 - 증거분리제출로 인하여 재판장으로서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없음에도, 판례상 수사기록에 나타난 주소, 연락처에 대한 조치 × 시 공시송달 부적법
 - 결국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매우 복잡한 절차¹⁸⁾를 거쳐야 함
 - 이는 처음부터 공소장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나,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하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임
- 문제점 2: 판례의 엄격한 판단과 공시송달 요건 준수에 대한 동기 부족
 - 실무상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경우 등 피고인의 책임이 일견 명백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사소한 위법이 있다면 상소권이 회복되고 있음
 - ①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경향 + ② 실행 선고 시 이유 불문하고 회복 실무례도 有

IV. 해외 입법례

■ 미국

-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특히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

18) ①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인장 발부 등 조치 → ② 검사에게 증거기록상 주소·연락처 확인 요청, 해당 주소·연락처로 송달·연락 시도 → ③ 6개월 후 공시송달 → ④ 2회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증거기록을 제출받고 선고기일 지정 → ⑤ 증거기록상 다른 주소·연락처 발견 시 변론재개, 공시송달 취소, 재차 연락 시도 → ⑥ 다시 공시송달 → ⑦ 다시 2회 불출석 시 재판 진행



는 경우 출석권 포기로 구성하여 불출석 재판 가능 + 도망자 권리 박탈

■ 독일

-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을 받은 후 속행기일에 자의적으로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재판 가능(제231조 제2항)

■ 평가

- 주요 국가들은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출석한 경우 공시송달 등의 요건을 거침이 없이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미국, 독일: 공판기일 1회 이상 출석 피고인은 비교적 쉽게 불출석 재판 허용
- 그에 반해 소속법은 ①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② 각종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에야 불출석 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 불출석 사유와 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제도 설계

■ 불출석 양상은 다양하고, 유형별로 불출석 재판의 필요성·정당성 異

- 양상 다양: 인식 유무 / 인식 정도 / 재판 단계(1회 기일, 속행기일, 선고기일)
- 예컨대 ① 공소장,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재판 계속 중임을 알지 못하여 불출석한 피고인과, ② 변론종결기일까지 출석한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의 필요성·정당성은 그 차이가 큼

■ 사유·단계별 차등 無

- 현행 소속법은 사유·단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궤석재판 요건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의 가능 여부를 구분

나. 문제점 2: 피고인에게 불출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현 제도는 출석권 포기, 정당한 사법권 행사 방해 사안에서도 ① 일률적인



각종 조치 및 6개월 요건으로 신속 재판 진행 불가, ② 불출석 재판에 대한 높은 불복 가능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차 권리 부여 → 불출석 유인 억제 ↓

다. 개선 방향

■ 불출석 재판 요건을 사유와 단계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요건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① 제도에 내재된 불출석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되, ② 그 외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개선방안

가. 불출석 사유·단계별 유형화

■ 개요

유형	내용	귀책사유 정도	절차 보장 필요성
1	공소장 부분 등 미송달	최약	최강
2	공소장 부분 등 송달 / 불출석	약	강
3	공판기일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	강	약
4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불출석	최강	최약

■ 1, 2유형

-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정도가 낮고, 절차적 권리 보장 필요성 높음

■ 3유형: 공판기일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

- 재판 계속 중인 사실과 불출석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
 - 다만,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 필요성은 4유형보다 ↑

■ 4유형: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불출석

- 귀책사유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추가적인 절차 보장의 필요성도 상소기간,



상소법원, 보호관찰 준수사항 고지 외에는 거의 없음

■ 개선 방향

- 1, 2유형 유지, 3, 4유형에서 소추법에 정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 있음

나. 3유형의 개선방안

1) 1, 2유형과의 차별화 필요성

- 1회라도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을 대면하고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 효과를 고지 받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이는 비교적 명백한 출석권 포기로 볼 수 있음
- 비교법적으로도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소재탐지 노력 없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국, 독일)

2) 새로운 형태의 불출석 재판 절차

■ 방향: '기간 단축'과 '사전조치 간소화'

- ① 기간 단축: 출석권을 포기하고 재판 일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시간적 요건(6개월) 부여 필요성은 없음
- ② 사전조치 간소화: 불출석의 원인이 '피고인의 소재 불명'이 아닌 '피고인의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주소 및 연락처로 송달과 연락을 시도할 의무를 법원에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 공시송달은 요구하지 않고, 2회 불출석 시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

- 처음으로 불출석한 기일에는 불출석 재판을 하지 않고 그 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불출석 횟수가 2회에 이를 때 불출석 재판을 진행

3) 선결 문제: 두 번째 기일 지정 시 소환장 송달 문제

■ 두 번째 기일 지정 시 소환장 송달 문제 해결 필요

- 첫 번째 불출석 기일: 소환장 송달이 문제 되지 않음(기일 구두 고지)
- 두 번째 불출석 기일: 소환장 송달 필요(기일 구두 고지 불가)

- 그러나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기일의 적법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함

-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소재 확인을 위한 각종 조치 후 공시송달을 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행 소촉법상 제도와 차이가 없게 됨**

■ '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도

- 피고인이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형소법 제61조)
-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집배원이 송달서류를 송달장소에 가지고 간 때 발생함

■ '우체에 부치는 송달' 및 '발송송달'의 활용 현황 → 사실상 활용 ×

- 법상 가능 ↔ 피고인 출석의 중요성, 향후 송달의 적법성 문제

■ '우체에 부치는 송달' 활용 필요성

- 2회 불출석 기일은 '우체에 부치는 송달' 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① 근거1: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재판부 연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다음 기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소환장 송달로 기일을 인식시킬 필요 없음
- ② 근거2: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기일 진행 저지 가능,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음 → 개정의 효과가 사실상 없음
- ③ 근거3: 현행법상 제도인 우체에 부치는 송달이나 발송송달 제도는 활용이 어려움 → 새로운 요건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도 마련 필요
 - 형소법 제61조, 민소법 제187조 요건 충족의 어려움
 - 나아가 실무상 법관들이 송달 적법성 문제 등을 우려하여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송달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④ 근거4: 형소법 제61조의 요건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받고도 기일에 불출석한 것'에는 피고인 의무 해태 측면에서 유사

4) 구체적 개정안의 내용

■ 제2항: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의 불출석 시 특례 규정(2회 불출석)



현행	개정안
<p>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p> <p>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p> <p>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신 설></p>	<p>④ 제1, 2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 제3항: 전항의 경우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특례 규정(형소법 61조 차용)

다. 4유형의 개선방안

1) 1, 2, 3유형과의 차별화 필요성

■ 귀책사유의 정도 및 출석권 포기의 징표

- 1, 2, 3유형에 비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 및 출석권 포기의 징표가 더욱 명백



■ 절차 보장의 필요성

- 나아가 이미 심리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3유형에 비하여 절차 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낮고, 피고인의 출석이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도 없음
- 판결 이유 등 설명, 각종 고지(상소, 준수사항 등)를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설명·고지 필요성에 비하여 불출석 재판 필요성이 높음 → 비교형량 필요

2) 개선 방향

■ ① 3유형과는 달리 2회 불출석을 요구할 필요 없음

- 추가적인 절차 보장 필요성이 낮고(상실하는 절차적 이익은 각종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정도),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피고인 출석이 기여하는 바도 없음
- 나아가 선고기일 불출석 시에도 항소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라는 구제수단도 남아있음
- 선고기일의 중요성은 누구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별도로 연기신청 등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에게 굳이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이유도 낮음

■ ② 법정형에 따라 불출석 재판 대상을 제한할 필요 없음

- 위헌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취지
- 그런데 변론종결기일까지 출석한 피고인은 방어권을 대부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굳이 10년 미초과 범죄로 불출석 재판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음

3) 구체적 개정안의 내용(3, 4유형 모두 개정 시)

현행	개정안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현행	개정안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 2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제1, 2, 4항----- ----- ----- ----- ----- ----- -----



현행	개정안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
② ~ ⑦ (생략)	② ~ ⑦ (생략)

3. 결론

■ 피고인 귀책사유 및 절차 보장 필요성 정도를 기준으로 요건 재설계 필요

- 4유형(선고기일 불출석)을 1순위로, 3유형(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을 2순위로 고려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 경과]

1. 일시 및 장소

가. 제2차 회의

■ 2024. 9. 26.(수) 18:30 ~ 22:30

■ 대법원 604호 회의실

나. 제3차 회의

■ 2024. 10. 23.(수) 15:00 ~ 18:20

■ 대법원 513호 회의실

2. 회의 요지

가.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증거 선별 신청 의무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가 과잉화되어 심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진정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및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요증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신청, 채택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부가 심증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함
 - 다만, 제시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중 ‘입증에 꼭 필요한 증거만을 제출’ 하도록 하는 조항의 부정적 어감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표현을 완화하되 ‘관련성이 있어도 기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입증’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입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증명’과 ‘탄핵’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여기서의 ‘증명’은 증명과 반증을 포함하는 사실적 의미로 사용되므로 ‘탄핵’과 구



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논의 끝에 형사소송규칙 ① 제132조 제2항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법원은 제1, 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은 그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짐

현행	개정안
<p>제132조(증거의 신청)</p> <p>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필요한</u>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신 설></p> <p>③ <신 설></p>	<p>제132조(증거의 신청)</p> <p>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삭제)</u>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u>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u>법원은 제1, 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은 그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u></p>

- 한편 법원이 증거를 기각할 때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 이 경우 모든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재판 진행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활용 관련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내용부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및 법률 개정 취지에 비추어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만으로 충분하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공판절차 갱신 관련



-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녹음물을 전부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서를 서증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당사자가 녹취서의 기재 내용이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하는 경우에는 녹음물의 해당 부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였음

■ 그 외 개선방안 관련

- 그 외 효율적인 증인채부 및 증인신문 계획 수립 방안, 서증조사 효율화 방안,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속화 방안 및 효율적인 심리모델 제안 부분 등 나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연구반에서도 이견이 없었음

나.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관련

■ 개선 방향 및 법 개정 필요성 인정

-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현재 실무의 위법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에 동의한 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였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실무 운영 필요

- 다만, 검사의 간이공판절차 신청이나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간이공판절차 신청 또는 동의 여부 확인이 피고인에게 마치 간이공판절차 선택을 유도하는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특히 변호인 없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간이공판절차 신청 또는 동의 의사 확인에 앞서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법 개정 추진 시 유의 사항(변호인 없는 사건 관련)

- 나아가 향후 법 개정 절차에서, 간이공판절차의 적용 범위 확대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백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실무 운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현재 실무 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대체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예상되므로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한 간이공판절차 적용 관련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관련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공감

-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도록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였음

■ 세부 요건

- 세부 요건(①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한 사안에 대하여는 2회 불출석을 요건으로 불출석 재판 실시, ② 선고기일 불출석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불출석 재판 실시, ③ 선고기일 불출석 사안은 법정형 제한을 두지 않음)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였음